여러분 곁에 늘 가까이 있는 은행
동일지축은행 226-0180

光州日報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단기 4342년 (음력 9월 17일)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18513호 1판 2009년 11월 3일 화요일

전남 논 2만ha 작목 전환 쌀 매입 400억 특별지원

道, 쌀 수급 안정 중장기 대책 발표

전남도가 오는 2014년까지 벼 재배 논 2만ha를 작목 전환해 쌀 생산량을 줄이고, 올해 수확하는 쌀 자체매입을 위해 400억 원을 지원하는 쌀 수급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또한, 들녘별 공동 영농단 조직을 통한 생산비 절감과 시·군 유통회사 확대 등을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 방안 내용을 담은 중·장기 대책도 함께 내놓았다. 〈관련기사 3면〉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2일 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쌀 수급안정을 위해 중기적으로는 전남도 내 벼 재배 논 2만ha를 오는 2014년까지 약용작물 및 시·군 별 유망 소득작목 등으로 작목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우선 내년에 생산성이 낮은 천수답을 중점으로 1천500ha에 대해 작목 전환을 추진하고 작목 전환에 따른 종묘 비용과 비료대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 지사는 이어 "단기적인 쌀 수급 안정 대책으로는 올해 수확되는 벼 매입을 위해 400억 원을 특별지원하고, 지난해 440억 원이던 벼 경영안정 대책비를 올해는 470억 원으로 늘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벼 매입을 위한 지원 자금은 농어촌진흥기금 100억 원과 농협 자금 300억 원 등 총 400억 원으로, 농가 시장출하량의 14%인 2만6천t 가량을 매입할 수 있다.

전남도는 지원자금을 벼를 매입하는 농협 RPC(미곡종합처리장) 등에 무이자 지원하고 6개월 이내 상환하는 대신 이자를 보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전남도의 이 같은 방침은 쌀 재배농가의 홍수출하를 일시적으로 막는 효과는 있지만 쌀값 안정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박 지사는 또 쌀 수급안정 대책 이외에 농업 경쟁력 강화와 장기적인 농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장기 대책으로 3농(농업·농촌·농민) 정책을 제시했다.

특히 쌀 적정 생산을 유지하며 생산비 절감에 주력하기 위해 들녘별 품종 단일화와 육묘·이앙·병해충 방제 등을 전담 수행하는 '공동 영농단' 450개소를 조직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박 지사는 "농촌문제는 농업문제만으로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내년부터 '농업·농촌·농업인'을 포괄하는 '3농 정책'을 본격 추진해 농업경쟁력 제고와 함께 농촌의 의료·복지·교육 여건과 생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남도는 이러한 정책을 강력 추진하기 위해 오는 2014년까지 ▲농업경쟁력 강화에 4조6천345억 원 ▲농촌 정주 여건 개선에 1조8천718억 원 ▲의료·복지·교육서비스 증진에 5조1천 274억 원 등 총 11조 633억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첫 눈 맞는 무등산 단풍 광주·전남 지역에 기습한파가 몰아친 2일 광주 무등산 원효사~너덜겅 약수터 간 도로에 첫눈이 내리면서 늦가을 단풍과 어우러져 장관을 연출하고 있다. ▶관련기사 7면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광주 문화특구 10개월 허송

추진단·광주시 분담 해결안돼 확보한 사업비 30억 반납할 판

옛 전남도청 별관 철거논란으로 아시아문화전당 건립사업이 차질을 빚은 데 이어 광주 문화수도 조성사업의 핵심현안인 투자진흥지구(문화특구)조성사업 마저 장기 표류하고 있다.

2일 광주시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이하 추진단)에 따르면 광주시 금남로 1가 전일빌딩 일대(1만5천 283㎡)를 문화특구로 육성하기 위해 올해 확보한 사업비(부지매입비) 30억원을 쓰지 못하고 반납할 처지에 놓였다.

문화특구는 문화전당 주변에 문화 관련 기업들이 입주하는 배후단지를 조성해 문화산업을 뿌리내리게 하는 사업으로, 문화전당 건립과 함께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2대 현안이다. 전액 민자개발 방식으로 조성되는 문화특구에는 251개 객실을 갖춘 10층 규모의 특급호텔과 문화산업 벤처타운, 창업보육센터 등이 들어서게 된다.

그러나 이 사업을 위해 확보한 국고 30억원이 지자체 보조사업 명목으로 지원됨에 따라 광주시가 예산 30억원을 확보해야 사업착수가 가능하지만, 추진단과 광주시가 무려 10개월 동안 사업비 분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오는 11월 사업비 반납을 눈앞에 두고 있다.

특히 예산 30억원은 문화특구 부지에 포함된 공공기관인 동부경찰서의 이전을 위해 그 부지 일부를 정부가 매입함으로써 민간자본 유치를 용이하게 하려는 포석이었으나, 결국 결실을 보지 못하게 됐다.

또 문화특구 조성사업의 특성상 정부·지자체의 선도투자, 보증을 바탕으로 한 민간자본 유치가 관건이지만, 추진단과 광주시의 투자가 이뤄지지 않아 현재 문화특구는 물론 향후 문화수도 관련 투자유치에도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문화특구 사업이 국책사업인 문화수도 조성사업 차원에서 추진되는 만큼 전액 국고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또 장기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하는 사업의 성격상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으로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전적으로 추진단에서 사업을 맡아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추진단 관계자는 "기획재정부가 문화특구 조성사업비의 집행 요건인 지자체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예산을 반납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며 "예산 30억원을 이월해 내년에 사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예산을 반납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영산강 샛강 살리기 청신호

심명필 4대강 추진본부장 "국비 충분히 지원"

전남도가 역점사업으로 추진중인 영산강 샛강 살리기에 충분한 국비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2일 영산강 살리기 사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갖고 영산강 수질 개선을 위해 도 차원에서 역점 추진하는 샛강 살리기에 국비지원을 건의해 이에 대한 최선의 지원을 약속받았다.

전남도는 이날 오후 도청 왕인실에서 박준영 도지사와 심명필 4대 강 살리기 추진본부장 주재로 '영산강 살리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회'를 가졌다. 〈인터뷰 3면〉

이번 협의회에는 4대 강 살리기 추진본부을 비롯한 행정안전부·농림식품부·환경부 등 4개 중앙부처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영산강유역환경청, 한국 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영산강·섬진강유역 12개 시·군 등이 참여했다.

이날 국토해양부는 영산강 살리기 사업 추진현황,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영산강 하구둑 구조개선 사업과 농업용 저수지 증고 등 추진 현황, 환경부에서는 영산강 수질개선사업 추진현황을 설명하고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전남도는 이날 영산강 샛강 살리기 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국비 지원을 건의하고 상습정체 구간이 돼버린 영산강 하구둑의 대체교량 건설과 ▲영암호~금호호 연락 수로 확장 ▲영산호 통선문 확장 등에 대해서도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심명필 4대 강 살리기 추진본부장은 "전남도가 영산강 살리기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변함없이 지지해 온 것에 대해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며 "영산강 살리기 사업에 최선의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신종플루 '심각' 격상

조기방학·휴교령 검토

정부가 3일 신종인플루엔자와 관련 국가전염병재난단계를 최고인 '심각'(Red)으로 올리고 후속대책을 발표한다. 〈관련기사 6면〉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 대책본부는 "신종플루 감염환자 증가세가 우려할 만한 수준에 이른데다 향후 3~4주간 이같은 증가추이가 계속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회의와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쳐 3일 오후 2, 3시께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발표내용에는 국가전염병재난단계 상향조정과 행정안전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한 중앙인플루엔자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인력동원 계획, 신종플루 감염 차단을 위한 부처별 대책 등이 담길 예정이다.

하지만 전염병 차단의 핵심인 학교 대책은 부처별, 전문가별로 이견이 많은데다 교육과학기술부의 행정지침이 하달된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현 대응수위를 유지하되 확산세가 이어질 경우 조기 방학, 휴교령 등 추가 대책을 마련한다는 선에서 정리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